

#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부요인, 개인요인, 정치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 예 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정부투명성, 삶의 만족, 정치이념의 조절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농수산, 자원·에너지, 다문화가정지원, 통일분야의 정책에 대한 만족은 대통령 신뢰를 강화하였으며, 반면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만족은 대통령 신뢰를 약화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수 중 정부투명성과 삶의 만족은 대통령 신뢰를 높인 반면, 정치이념은 신뢰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과 조절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대통령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으며, 문화관광정책 만족의 경우 정부투명성 및 삶의 만족과 상호작용하여 대통령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유형별로 대통령 신뢰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신뢰를 높이는 정책은 강화하고, 대통령 신뢰를 저해하는 정책은 보완되는 등 정책별로 차별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설계하여 대통령 신뢰 형성의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대통령 신뢰, 정책만족, 정책유형, 정부 투명성, 삶의 만족

## I. 서론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여러 차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시민의 정치적 태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권력교체를 넘어, 국민이 정치지도자에게 부여한 신뢰가 붕괴되는 상징적 사건으로 작용한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지도자에게 부여한 정치적 신뢰의 근간이 붕괴되는 위기 상황을 상징한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는, 국민의 정치적 불신이 단지 개인에 대한 지지 철회의 차원을 넘어,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위임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신뢰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지지율'만을 활용할 경우, 여론의 단기적 변동성이나 정파적 정서에 따른 편향된 해석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실제로 탄핵 직전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서적 반

감과 윤리적 불신이 급격히 분출되며 대통령 신뢰가 급속히 붕괴된 사실은,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확인할 필요성을 뚜렷하게 제기한다. 또한 정책유형에 따라 국민들의 정책만족도와 대통령 신뢰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정책유형별 실효성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정책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이며 학문적,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혜자의 정보접근성, 삶에 대한 평가,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동일한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로 이어지는 경로와 강도가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 투명성은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핵심요인으로, 투명성이 높을수록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투명성이 낮을 경우 이러한 관계는 약화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대통령 신뢰의 관계가 강화되며,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경우 이들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 시민의 이념 성향에 따라라도 동일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신뢰 전이(trust transfer)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유형별 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요인, 개인요인, 정치요인에 따라 이들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대통령 신뢰의 개념과 접근방법

신뢰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시민과 정치제도를 연결하여 정부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며(Bianco, 1994; Gamson, 1968; Hetherington, 1998), 체제의 안정성과 기능적 운영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영역에서 신뢰는 대통령 신뢰, 정부신뢰, 정치적 신뢰, 제도적 신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대통령 신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 정책 수행능력, 리더십, 공정성 및 정직성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의미하며(Norris, 1999),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방향성과 행정부 개혁을 주도하는 최고책임자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이숙종·유희정, 2015).

한편,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라는 지위때문에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는 종종 혼동되기도 하나,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정부신뢰는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는 반면(Easton, 1965), 대통령 신뢰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구분된다(Norris, 1999). 또한 정부신뢰가 사회제도 전반의 작용 속에서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데 반해, 대통령 신뢰는 단임제라는 정치제도 하에서 비교적 단기적이고 변동 폭이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이숙종·유희정, 2015).

정치적 신뢰는 정치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규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일반

적 기대를 의미하며(Zmerli & Hooghe, 2014), 제도 그 자체보다는 정치행위자와 그들의 행태에 초점을 둔다(Citrin & Stoker, 2018). 이에 반해 제도적 신뢰는 정치·행정 제도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효용(expectation utility)의 개념에 기반하며(Coleman, 1990; Dasgupta, 1988), 이는 주로 제도의 성과평가를 통해 형성된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신뢰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불신으로 전환될 수 있다.

대통령 신뢰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 행위 및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평가에 따라 형성되는 정치적 신뢰의 하위유형으로 간주된다(Norris, 1999).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통령 신뢰의 결정 요인으로 정치사회화(Norris, 2011), 개인의 경험(Gay, 2002), 성격 특성(Freitag & Ackermann, 2016) 등을 제시해 왔으며(Zmerli & van der Meer, 2017), 특히 국정운영 성과와 정책수행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정치적 신뢰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의 정치성과 기준을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한다(Citrin & Stoker, 2018).

이에 따라 대통령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투입요인은 대통령이 국민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유권자의 이념과 기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기준으로 신뢰가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Fiorina & Abrams, 2011). 유권자와 대통령 간의 이념적 일치성이 높을수록 신뢰수준은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신뢰는 저하된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대통령 신뢰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정부신뢰보다 훨씬 더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다(Hetherington & Rudolph, 2015).

둘째, 과정요인은 대통령의 정책수행 방식, 리더십, 정직성 등 정치적 행위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부패나 정치적 스캔들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하락시키는 반면(Chanley et al., 2000), 정책 추진력과 국민과의 소통 능력은 신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Hibbing & Theiss-Morse, 2002). 대통령 신뢰는 제도 신뢰와 달리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성향, 언행, 정치적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며(Whiteley et al., 2016; Hakhverdian & Mayne, 2012), 이에 따라 정책의 실현 여부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역시 신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산출요인은 정책성과,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성과가 대통령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다.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할 경우 대통령 신뢰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기 침체나 사회 불안정이 심화되면 신뢰는 감소한다(Hibbing & Theiss-Morse, 2001). 다만 유권자들은 경제 이외에도 복지, 보건, 치안 등 다양한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Marsh & Tilley, 2010), 정책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역시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Hetherington & Rudolph, 2008). 실제로 객관적인 성과가 좋더라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할 경우 신뢰는 낮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긍정적인 리더십 이미지는 신뢰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과 인지적 편향이 정책성과 평가와 대통령 신뢰 형성에 중요한 조절

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한다(Curtis, 2014).

## 2.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

정책만족(policy satisfaction)은 국민이 공공정책의 기획, 집행, 결과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단순한 정책수용 여부를 넘어 정책의 효과성, 공정성, 적절성, 투명성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Yoon & Hwang, 2022). 이러한 정책만족은 정부 정책이 국민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형성되며, 정책 신뢰, 정책수용성, 정치적 지지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정책만족은 정부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Tyler, 1990). 특히 오늘날 정책만족은 정책성과뿐 아니라 정책 소통, 절차적 정당성과 같은 질적 요소까지 반영하는 종합적 정책평가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대불일치(disconfirmation) 이론은 개인이 정책에 대해 갖고 있던 사전 기대와 실제 정책 경험 간의 불일치 여부가 만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Oliver, 1980). 기대가 초과되면 긍정적 만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Hirschman(1970)은 개인이 정책에 불만족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이탈(exit)', '표현(voice)', '충성(loyalty)'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정책만족도가 낮을 경우, 국민은 정책 불복종이나 정치적 무관심과 같은 이탈 반응을 보이거나, 청원·시위 등 표현 행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이나 신뢰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존 체제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Tyler(1990)는 정책 결과뿐 아니라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정책만족과 정책 순응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이 정책수용성과 정치적 신뢰 형성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대통령 신뢰는 정치적 신뢰의 한 유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정책수행능력, 리더십, 공정성과 정직성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의미한다(Norris, 1999). 대통령 신뢰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정책만족도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기능한다. 이 때 정책만족은 정책에 대한 단순한 객관적 성과평가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기대수준과 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기대충족 여부에 따라 보상 또는 처벌의 논리에 의해 신뢰를 형성한다(Kumlin, 2007; Van de Walle & Bouckaert, 2003).

또한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적용되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지형·박형준(2023)은 정책유형에 따라 대상집단의 특성, 정치적 대표성, 참여 불균형, 영향력 격차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시민의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로 이어지는 과정은 정책유형의 속성, 수혜자 이미지, 체감성, 갈등구조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심리적 귀속 과정이라고 보았다. 즉 각 정책은 정책유형에 따라 수혜구조와 갈등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정책유형은 정책내용뿐 아니라 정치적 역학과 정책 결정구조까지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특정 정책에 대한 만족이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책의 성격과 정치·제도적 맥락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유형에 관한 대표적 논의로 Lowi(1972)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제약하여 자유나 재량권을 줄이는 정책이고, 재분배정책은 소득이전과 관련된 복지정책으로서 고소득층의 부담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에 이익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배분정책은 특정 대상에게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유형이며, 구성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이나 선거구 조정 등 정부 구조의 재정비와 관련된 정책유형이다. 그 외에 Ripley & Franklin(1986)은 정책 목적의 성격에 따라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세분화하였고, Almond & Powell(1978)은 체제이론에 기반하여 정책유형을 분류(추출·배분·규제·상징정책)하였으며, Michell & Michell(1969)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정책유형을 분류(자원 동원, 배분, 비용부담, 통제, 적응, 정치적 역할 분업 정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Lowi(1972)의 분류에 기반하여 정책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이 신뢰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분배정책은 공공자원을 특정 집단에 제공하는 정책으로 갈등이 적고 수혜자가 명확하며 체감성도가 크다. 시민은 정책성가를 대통령 리더십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으며(Ripley & Franklin, 1980), 대통령이 협조적 정책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로 인식되면서 정책성가가 신뢰로 전이(trust transfer)되는 효과가 가장 크다. 둘째, 재분배정책은 자원을 조정해 소득과 권리를 이동시키는 정책으로 이념적 갈등과 공정성 인식이 핵심이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정치성향과 수혜자 이미지에 따라 달라지며(Rudolph & Evans, 2005), 신뢰전이 형태는 조건적이고 양면적인 구조를 가진다(Schneider & Ingram, 1993).

셋째, 규제정책은 행위 제한을 통해 공공이익을 도모하며 갈등 수준이 높고 이해당사자 간 신뢰 양극화를 초래하기 쉽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뢰 회복이 가능하나(Chanley et al., 2000), 평상시에는 강한 규제에 의한 반발과 불신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특정 집단에 편향된 인식이 생기면 신뢰 형성이 오히려 손상될 수 있다. 넷째, 구성정책은 정부 조직과 권력 구조를 다루며 체감도가 낮고 수혜자가 불분명해 신뢰 전이가 제한적이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는 지도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Easton, 1965; 이숙종·유희정, 2015), 상징정치의 형태로 간접적 신뢰 형성이 가능하다. 이처럼, 정책유형은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로 귀속되는 경로를 구조화하는 핵심변수이며, 유형별 정치적 맥락과 귀속 방식에 대한 이해는 대통령 신뢰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책만족은 대통령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정부요인, 개인요인, 정치요인과 대통령 신뢰

대통령 신뢰는 Zaller(1992)의 수용-수락-표출(RAS: Receive-Accept-Sample) 모형에 근거하여 정부요인(정부투명성), 개인요인(삶의 만족), 정치요인(정치이념)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정부요인으로 정부 투명성은 공공기관의 운영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 행정 수행과

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Grimmelikhuijsen & Klijn, 2015). 정부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시민은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되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 증진으로 이어진다(Easton, 1965; Citrin & Stoker, 2018). 특히 정보공개 수준은 정부신뢰 형성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대통령 신뢰를 매개로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로 확장되는 경로를 형성한다(이숙중·유희정, 2015). 반면, 정부 투명성이 낮을 경우 시민들은 정부가 부패하거나 사익을 추구한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개인요인으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행복감으로 정의된다(Diener et al., 1985).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강화되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etherington, 1998). 특히 경제 상황이 안정적인 경우, 대통령의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삶의 만족과 대통령 신뢰 모두가 증가하며, 반대로 경제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이 두 지표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이근수, 2009).

셋째, 정치요인으로 정치이념은 사회 질서의 구성 방식과 그 실현 수단에 대한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Erikson & Tedin, 2003). 일반적으로 정치이념은 좌파(진보)와 우파(보수)로 구분되며(Bobbio, 1996), 시민의 이념적 성향은 대통령 신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Norris, 1999).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게,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에게 더 높은 신뢰를 보이며,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유권자의 정치이념이 불일치할 경우 대통령 신뢰수준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황성욱 외,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정부요인, 개인요인, 정치요인은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론적·경험적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먼저 정책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황성수(2024)는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치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며, 정책만족은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이고, 다차원적 정부신뢰 구조에서 정책만족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재국 외(2025)는 지방정부 역량이 도시재생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으며, 신뢰 중심의 사회자본이 이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흥재(2024)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인지 및 이용수준이 정책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이며, 이는 자긍심 제고에도 직접적으로 정(+)의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원성찬(2024)은 방산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규제기관 활동과 정책만족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규제기관의 활동이 정책만족도를 매개하며, 그 중에서도 사내 안전문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한 윤수재·황태연(2023)은 국정과제별 시민의 정책만족도를 분석하여, 복지정책은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경제정책은 정부의 추진력 부족이 주요 불만요인이며, 정책만족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구조적 개선요구가 강하게 표출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명철·민병익(2023)은 기초연금정책에 대한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정책이해도와 담당자의 책임성이 핵심변수로 도출되었으며, 접근성, 공정성, 지역, 소득 등 다양한 요소가 영역별로 다르게 작용함을 실증하였다. 그 외 조규철 외(2023)는 정부의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고, 정책만족이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소순창·한형서(2023)는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청년복지와 장애인복지가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낮은 영역임을 밝히고, 일부 정책은 과잉투자 영역으로 나타나 정책 간 균형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은 대통령 신뢰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병규·이근수(2013)는 대통령 신뢰가 행정부신뢰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니며, 공통된 신뢰 변수도 대통령 신뢰에서 더 강하게 작용함을 밝혔다. 그리고 이숙중·유희정(2015)은 대통령 신뢰의 정부신뢰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했으며,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변수가 두 신뢰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이근수(2009)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이 국정운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적 평가와 정부에 대한 책임 인식, 정부신뢰, 정당 일체감 등이 대통령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황성욱·김태완·박혜빈(2017)은 소통 역량, 언론 보도 빈도, 소통 채널 활용이 대통령 신뢰를 매개하여 대통령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기존 연구들은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 간의 개념적 차이에 주목하거나(김병규·이근수, 2013),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숙중·유희정, 2015). 또한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이 대통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근수, 2009), 대통령의 소통 능력과 신뢰 및 지지도 간의 관계(황성욱 외, 2017)에 대한 실증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정책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만족이 정부신뢰(조규철 외, 2023; 황성수, 2024), 자긍심(이홍재, 2024), 정책성과 인식(최재국 외, 2025) 등에 미치는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요인, 정책인지, 행정 역량, 사회자본 등과 정책만족의 중심성과 경로 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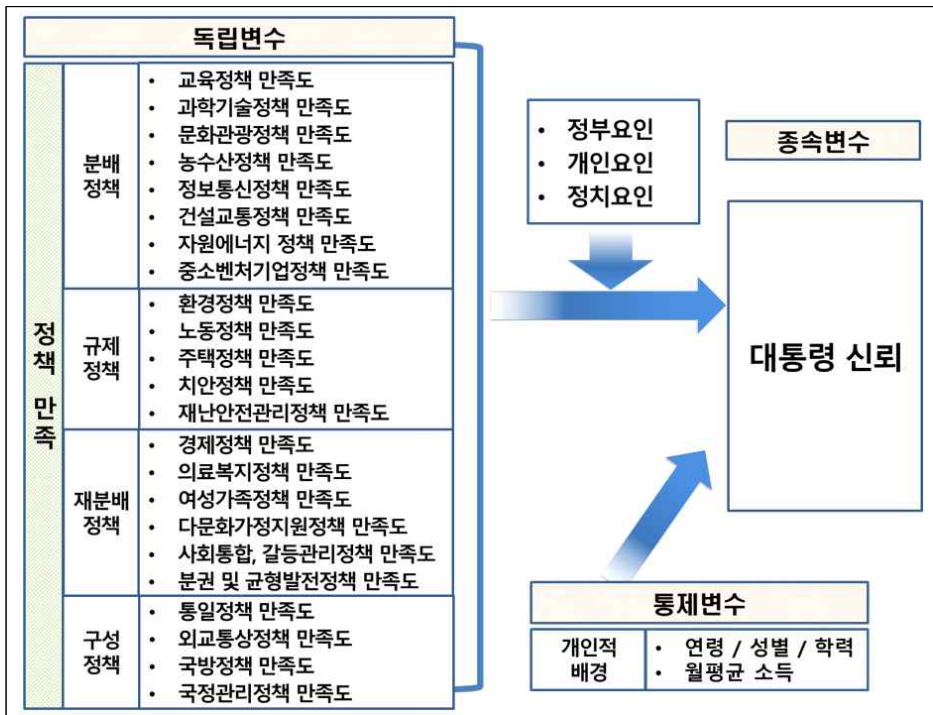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정책만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 간 관계에서 정부투명성, 삶의 만족, 정치이념이라는 조절변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만족의 효과가 개인 인식 및 제도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 Ⅲ. 연구설계

#### 1. 분석 틀

대통령 신뢰는 정부의 정당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고, 정책만족은 대통령 신뢰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정부요인(정부투명성), 개인요인(삶의 만족), 정치요인(정치이념)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수용자의 인식과 제도적 환경에 따라 대통령 신뢰의 형성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모형은 주요 변수인 종속변수를 ‘대통령 신뢰’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정책유형별 정책만족도로 구성하며, 이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정부투명성, 삶의 만족, 정치이념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에 기타 영향을 미치는 요인(통제변수)으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 내용을 반영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 2. 변수, 측정지표,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종속변수인 대통령 신뢰를 Norris(1999)의 논의에 기반하여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 정책수행능력, 리더십, 공정성과 정직성 등에 대해 가지는 정치적 신뢰로 규정한다. 대통령 신뢰는 국민의 정책수용성과 밀접히 연관되며,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구성하는 핵심적 지표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통령 신뢰를 측정하는 지표로 '청와대를 신뢰하는 정도'를 설정하고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정책만족은 공공정책의 기획, 집행, 결과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평가로서 (Yoon & Hwang, 2022), 효과성, 공정성, 적절성, 투명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수용 수준을 넘어서, 정부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며(Tyler, 1990), 대통령 신뢰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 결과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 신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Kumlin, 2007).

정책만족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윤수재·임다희, 2020), 본 연구는 Lowi(1972)의 정책유형 논의에 기반하여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정책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네 가지 정책유형은 정책갈등의 성격,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 정책결정구조 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지만(Lowi, 1972), 한국적 맥락에서 정책유형은 혼합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정치·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최용선, 2013). 또한 각 분야에서 여러 유형의 정책을 사용하면서 분야별 정책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분야별 특징과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정책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Ripley & Franklin, 1986; 강보경, 2017)가 나타나고 있는바, 탐색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독립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분배정책은 예산 지원, 인프라 개발 등 공공자원을 특정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으로, 갈등 수준이 낮고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높으며, 성과 기반의 대통령 신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Hetherington, 1998).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특성 및 선행연구의 논의에 기반하여 교육, 과학기술, 농수산, 건설교통, 중소기업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를 분배정책 분야의 정책만족도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둘째, 규제정책은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 공공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갈등 가능성이 높은 대신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Chanley et al., 2000; 황성욱 외, 2017). 즉 대통령의 소통 역량이 정책수행의 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는 환경, 노동, 주택, 치안, 재난안전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를 규제정책 분야의 정책만족도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셋째, 재분배정책은 자원의 기존 배분구조를 변경하는 정책으로, 이념적 갈등가능성이 크며, 해당 정책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대통령 신뢰 형성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Rudolph & Evans, 2005; 김병규·이근수, 2013). 본 연구는 재분배정책 분야의 정책만족도 측정변수를 경제, 복지, 여성가족, 다문화가정,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넷째, 구성정책은 정부

조직 개편, 권력구조 조정 등 정치제도 자체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으로, 시민체감도는 낮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통해 대통령 신뢰를 형성하고 정부 전반의 신뢰로 확장될 수 있다(Easton, 1965; 이숙중·유희정, 2015). 본 연구는 구성정책 분야의 정책만족도 측정변수로 통일, 외교, 국방, 국정관리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심리적·정치적 층위의 조절변수로 정부투명성, 삶의 만족, 정치이념을 사용하였다. 세 변수는 Zaller(1992)의 수용-수락-표출(RAS: Receive-Accept-Sample) 모형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 신뢰 형성 과정에서 상이한 조절기능을 수행하며,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로 전이되는 인지적 경로를 설명한다. 먼저, 정부투명성은 정책 정보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정보 수용(Receive) 단계에서 인지적 입구(gateway)로 기능하며, 정책 결정과 행정과정의 공개성과 신뢰성을 결정하여 초기 정책인식의 형성을 돕는다. 그리고 삶의 만족은 정책이 개인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내면적으로 평가하는 수락 단계에서 심리적 매개요인의 역할을 하며, 시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수용할 가능성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정치이념은 특정 정책이나 정책 수행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표출단계에서 인지적 프레임 또는 해석의 틀로 작용한다.

이러한 세 변수는 병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인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효과의 정치적 귀속과정과 신뢰 전이 메커니즘 전반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정치적 신뢰는 정책내용과 함께 그것이 실현되는 제도적 맥락, 심리적 기반, 정치적 조건에 의해 심층적으로 조절·결정된다(Citrin & Stoker, 2018). 따라서 본 연구의 세 조절변수는 대통령 신뢰 형성 과정을 다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조정장치(integrated moderating mechanism)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조절변수의 개념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투명성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수행이 외부에 공개되어, 국민이나 외부 행위자들이 정부의 내부운영 및 성과를 감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Grimmelikhuisen & Klijn, 2015). 정부투명성이 높을수록 국민은 정부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며, 대통령 신뢰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Easton, 1965; Citrin & Stoker, 2018). 본 연구는 선행연구(이숙중·유희정, 2015) 등에 기반하여 정부투명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우리나라 정부의 업무가 투명하게 개방되었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주관적 행복감으로 정의되며(Diener et al., 1985), 높은 삶의 만족은 정부 성과와 운영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져 대통령 신뢰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Hetherington,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최예나, 2024) 등에 기반하여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지표로 '귀하의 현재 삶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정치이념은 사회 질서의 구성원칙과 실현방식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의 집합을 의미하며(Erikson & Tedin, 2003),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및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유권자와 대통령의 소속정당 간 정치적 이념이 일치할 경우 대통령 신뢰가 강화되며(Bobbio, 1996; Norris, 1999), 정치이념이 불일치할 경우, 정책 수행능력이나 국정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대통령 신뢰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황성욱·김태완·박혜빈, 2017). 본 연구는 선행연구(이숙중·유희정, 2015) 등에 기반하여 정치이념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나눌 때 해당하는 정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설정하였으며, 세부 측정지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령, 성별, 학력, 월평균 소득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 변수와 측정지표

변수		측정치표	측정방법
종속 변수		대통령(청와대) 신뢰	① 매우 불신 - ⑤ 매우 신뢰
통제 변수	개인적 배경	연령	① 20대- ⑤ 60대 이상
		성별	1: 남성, 0:여성
		학력	① 무학 - ⑧ 대학원 이상
		월 평균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 ⑪ 1000만원 이상
독립 변수 (정책유형별 만족)	분배정책	교육정책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과학기술정책 만족	
		문화관광정책 만족	
		농수산정책 만족	
		정보통신정책 만족	
		건설교통정책 만족	
		자원·에너지정책 만족	
		중소벤처기업정책 만족	
	규제정책	환경정책 만족	
		노동정책 만족	
		주택정책 만족	
		치안정책 만족	
		재난·안전관리정책 만족	
	재분배 정책	경제정책 만족	
		의료복지정책 만족	
		여성가족정책 만족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	
		사회통합·갈등관리정책 만족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	
	구성정책	통일정책 만족	
외교통상정책 만족			
국방정책 만족			
국정관리정책 만족			
조절 변수	정부요인	정부투명성	① 매우 불투명 - ⑤ 매우 투명
	개인요인	삶의 만족	① 매우 불만 - ⑪ 매우 만족
	정치요인	정치이념	① 매우 보수 - ⑪ 매우 진보

본 연구는 분석자료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도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따라 정식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본 조사는 행정 및 정부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성별·연령별 모집단 비례 할당과 층화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전국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한 인식, 행정에 대한 평가, 정부 역할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자료로 판단된다. 자료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1)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에서 정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정부요인인 정부투명성이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분석 결과 분배정책 중 교육정책 만족( $t=3.475$ ,  $p<.05$ ), 농수산정책 만족( $t=6.841$ ,  $p<.01$ ), 자원·에너지정책 만족( $t=3.298$ ,  $p<.05$ )과 재분배정책 중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 $t=3.020$ ,  $p<.05$ ), 구성정책 중 통일정책 만족( $t=1.821$ ,  $p<.10$ ) 및 조절변수인 정부투명성( $t=11.916$ ,  $p<.01$ )이 대통령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 $t=-1.986$ ,  $p<.10$ )은 대통령 신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변수에 유형별 정책만족과 정부투명성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독립변수들은 모형 2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관광정책 만족( $t=1.817$ ,  $p<.10$ ), 농수산정책 만족( $t=2.280$ ,  $p<.10$ ),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 $t=2.157$ ,  $p<.10$ )의 경우 정부투명성과의 상호작용항이 대통령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치안정책 만족( $t=-2.652$ ,  $p<.05$ ) 및 경제정책 만족( $t=-1.715$ ,  $p<.10$ )과 정부투명성과의 상호작용항은 대통령 신뢰에 부(-)의 영향을 보였다.

〈표 2〉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에서 정부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베타	t	베타	t		
통제 변수	개인적 배경	연령	0.045	2.318*	0.041	2.146*	
		성별	0.004	0.188	0.015	0.747	
		학력	-0.012	-0.585	-0.009	-0.433	
		월 평균 가구소득	-0.030	-1.532	-0.037	-1.867*	
독립 변수	분배정책	교육정책 만족도	0.106	3.475**	0.107	3.493***	
		과학기술정책 만족도	0.033	1.208	0.030	1.081	
		문화관광정책 만족도	-0.031	-1.102	-0.039	-1.357	
		농수산정책 만족도	0.224	6.841***	0.208	6.313***	
		정보통신정책 만족도	0.025	0.849	0.046	1.540	
		건설교통정책 만족도	0.036	1.296	0.041	1.463	
		자원·에너지정책 만족도	0.102	3.298**	0.107	3.381**	
		중소벤처기업정책 만족도	0.029	0.894	0.041	1.275	
	규제정책	환경정책 만족도	-0.012	-0.384	0.001	0.036	
		노동정책 만족도	0.030	0.999	0.039	1.290	
		주택정책 만족도	-0.018	-0.559	-0.011	-0.362	
		치안정책 만족도	0.035	1.138	0.033	1.049	
		재난·안전관리정책 만족도	-0.024	-0.800	-0.035	-1.150	
	재분배 정책	경제정책 만족도	-0.027	-0.859	-0.017	-0.550	
		의료복지정책 만족도	-0.018	-0.589	-0.042	-1.327	
		여성가족정책 만족도	0.028	1.071	0.016	0.614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도	0.093	3.020**	0.085	2.769**	
		사회통합·갈등관리정책 만족도	0.000	0.019	0.000	0.005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도	-0.062	-1.986*	-0.062	-1.980*	
	구성정책	통일정책 만족도	0.056	1.821*	0.055	1.791*	
		외교통상정책 만족도	0.030	0.973	0.040	1.271	
		국방정책 만족도	0.010	0.362	0.011	0.385	
		국정관리정책 만족도	-0.026	-0.891	-0.016	-0.543	
	조절 변수	정부요인	정부투명성	0.272	11.916***	0.263	11.544***
	상호 작용항	분배정책	교육정책 만족도			-0.023	-0.698
			과학기술정책 만족도			0.028	0.928
			문화관광정책 만족도			0.057	1.817*
			농수산정책 만족도			0.084	2.280*
정보통신정책 만족도					-0.051	-1.585	
건설교통정책 만족도					0.045	1.486	
자원·에너지정책 만족도					0.035	1.096	
중소벤처기업정책 만족도					-0.008	-0.239	
규제정책		환경정책 만족도			-0.011	-0.332	
		노동정책 만족도			0.048	1.452	

재분배 정책	주택정책 만족도			0.043	1.284
	치안정책 만족도			-0.090	-2.652**
	재난·안전관리정책 만족도			0.029	0.874
	경제정책 만족도			-0.059	-1.715*
	의료복지정책 만족도			0.024	0.716
	여성가족정책 만족도			0.001	0.045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도			-0.047	-1.360
	사회통합·갈등관리정책 만족도			-0.007	-0.251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도			0.072	2.157*
	구성정책	통일정책 만족도			-0.033
	외교통상정책 만족도			-0.036	-1.033
	국방정책 만족도			0.027	0.926
	국정관리정책 만족도			-0.008	-0.237
(상수)			15.202***		14.746***
R제곱			0.486		0.505
수정된 R제곱			0.476		0.488
F값 변화량			49.61***		2.459***

주: \*p<0.10, \*\*p<0.05, \*\*\*p<0.01

## 2)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에서 개인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개인요인인 삶의 만족이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형 1의 분석 결과, 분배정책 중 교육정책 만족( $t=5.571, p<.01$ ), 농수산정책 만족( $t=7.077, p<.01$ ), 자원·에너지정책 만족( $t=3.891, p<.01$ )과 재분배정책 중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 $t=3.251, p<.05$ ), 구성정책 중 통일정책 만족( $t=2.186, p<.10$ ) 및 조절변수인 삶의 만족( $t=2.877, p<.05$ )이 대통령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 $t=-2.272, p<.10$ )은 대통령 신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변수에 유형별 정책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독립변수들은 모형 2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였으며, 새로이 외교통상정책 만족( $t=1.796, p<.10$ )이 대통령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 만족( $t=2.167, p<.10$ ),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 $t=1.682, p<.10$ ), 통일정책 만족( $t=1.801, p<.10$ )은 삶의 만족과 상호작용항이 대통령 신뢰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통신정책 만족( $t=-2.040, p<.10$ ), 치안정책 만족( $t=-2.780, p<.05$ ), 외교통상정책 만족( $t=-1.885, p<.10$ )과 삶의 만족과의 상호작용항은 대통령 신뢰에 부(-)의 영향을 보였다.

〈표 3〉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에서 개인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베타	t	베타	t		
통제 변수	개인적 배경	연령	0.043	2.118*	0.048	2.367*	
		성별	-0.008	-0.372	-0.010	-0.500	
		학력	-0.019	-0.891	-0.021	-1.010	
		월 평균 가구소득	-0.036	-1.724*	-0.037	-1.737*	
독립 변수	분배정책	교육정책 만족도	0.174	5.571***	0.172	5.484***	
		과학기술정책 만족도	0.043	1.501	0.042	1.443	
		문화관광정책 만족도	-0.039	-1.306	-0.044	-1.461	
		농수산정책 만족도	0.242	7.077***	0.243	7.073***	
		정보통신정책 만족도	0.030	0.969	0.016	0.518	
		건설교통정책 만족도	0.032	1.114	0.037	1.279	
		자원·에너지정책 만족도	0.126	3.891***	0.138	4.212***	
		중소벤처기업정책 만족도	0.002	0.056	-0.006	-0.169	
	규제정책	환경정책 만족도	-0.004	-0.134	0.000	0.013	
		노동정책 만족도	0.038	1.208	0.047	1.486	
		주택정책 만족도	-0.025	-0.767	-0.024	-0.723	
		치안정책 만족도	0.046	1.422	0.046	1.430	
		재난·안전관리정책 만족도	-0.010	-0.316	-0.012	-0.387	
	재분배 정책	경제정책 만족도	-0.015	-0.468	-0.003	-0.106	
		의료복지정책 만족도	-0.017	-0.522	-0.018	-0.552	
		여성가족정책 만족도	0.021	0.775	0.021	0.768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도	0.104	3.251**	0.109	3.347**	
		사회통합·갈등관리정책 만족도	0.001	0.021	-0.012	-0.412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도	-0.074	-2.272*	-0.077	-2.365*	
	구성정책	통일정책 만족도	0.070	2.186*	0.062	1.909*	
		외교통상정책 만족도	0.050	1.535	0.059	1.796*	
		국방정책 만족도	0.025	0.859	0.020	0.710	
		국정관리정책 만족도	-0.038	-1.258	-0.037	-1.196	
	조절 변수	개인요인	삶의 만족	0.062	2.877**	0.074	3.343**
	상호 작용항	분배정책	교육정책 만족도			0.071	2.167*
			과학기술정책 만족도			-0.029	-0.935
			문화관광정책 만족도			0.034	1.018
			농수산정책 만족도			0.019	0.513
정보통신정책 만족도					-0.066	-2.040*	
건설교통정책 만족도					0.009	0.312	
자원·에너지정책 만족도					0.008	0.259	
중소벤처기업정책 만족도					0.026	0.716	
규제정책		환경정책 만족도			0.027	0.756	
		노동정책 만족도			0.015	0.445	

재분배 정책	주택정책 만족도			0.004	0.097
	치안정책 만족도			-0.099	-2.780**
	재난·안전관리정책 만족도			-0.004	-0.103
	경제정책 만족도			-0.032	-0.891
	의료복지정책 만족도			0.008	0.226
	여성가족정책 만족도			0.023	0.803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도			0.021	0.567
	사회통합·갈등관리정책 만족도			0.001	0.040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도			0.061	1.682*
	통일정책 만족도			0.066	1.801*
구성정책	외교통상정책 만족도			-0.068	-1.885*
	국방정책 만족도			0.014	0.445
	국정관리정책 만족도			-0.040	-1.254
	(상수)		14.934***		14.846***
R제곱		0.439			0.454
수정된 R제곱		0.429			0.435
F값 변화량		41.14***			1.721*

주: \*p<0.10, \*\*p<0.05, \*\*\*p<0.01

### 3)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에서 정치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정치요인인 정치이념이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형 1에서는 분배정책 중 교육정책 만족( $t=5.802, p<.01$ ), 농수산정책 만족( $t=6.834, p<.01$ ), 자원·에너지정책 만족( $t=3.671, p<.01$ )과 재분배정책 중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 $t=3.158, p<.05$ ), 구성정책 중 통일정책 만족( $t=2.164, p<.10$ )은 대통령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 $t=-2.224, p<.10$ )과 조절변수인 정치이념( $t=-1.776, p<.10$ )은 대통령 신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변수에 유형별 정책만족과 정치이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독립변수들은 모형 2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관광정책 만족( $t=3.393, p<.05$ ), 노동정책 만족( $t=2.869, p<.05$ ),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 ( $t=2.302, p<.10$ )의 경우 정부이념과의 상호작용항이 대통령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건설교통정책 만족( $t=-1.776, p<.10$ )과 정부이념과의 상호작용항은 대통령 신뢰에 부(-)의 영향을 보였다.

〈표 4〉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에서 정치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베타	t	베타	t	
통제변수	개인적 배경	연령	0.039	1.938*	0.040	1.969*	
		성별	-0.007	-0.354	-0.007	-0.332	
		학력	-0.009	-0.441	-0.011	-0.514	
		월 평균 가구소득	-0.018	-0.898	-0.019	-0.939	
독립변수	분배정책	교육정책 만족도	0.181	5.802***	0.177	5.629***	
		과학기술정책 만족도	0.050	1.733*	0.044	1.505	
		문화관광정책 만족도	-0.042	-1.402	-0.047	-1.547	
		농수산정책 만족도	0.235	6.834***	0.236	6.827***	
		정보통신정책 만족도	0.031	0.982	0.037	1.164	
		건설교통정책 만족도	0.039	1.340	0.039	1.343	
		자원·에너지정책 만족도	0.119	3.671***	0.117	3.558***	
		중소벤처기업정책 만족도	0.007	0.212	0.010	0.298	
	규제정책	환경정책 만족도	-0.006	-0.182	0.004	0.124	
		노동정책 만족도	0.037	1.189	0.044	1.410	
		주택정책 만족도	-0.024	-0.731	-0.038	-1.155	
		치안정책 만족도	0.045	1.406	0.042	1.277	
		재난·안전관리정책 만족도	-0.002	-0.065	-0.004	-0.131	
	재분배 정책	경제정책 만족도	-0.017	-0.524	-0.010	-0.292	
		의료복지정책 만족도	-0.020	-0.613	-0.018	-0.549	
		여성가족정책 만족도	0.023	0.827	0.026	0.947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도	0.102	3.158**	0.102	3.153**	
		사회통합·갈등관리정책 만족도	0.007	0.255	0.004	0.146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도	-0.072	-2.224*	-0.077	-2.338*	
	구성정책	통일정책 만족도	0.069	2.164*	0.062	1.911*	
		외교통상정책 만족도	0.044	1.353	0.038	1.157	
		국방정책 만족도	0.032	1.116	0.045	1.536	
		국정관리정책 만족도	-0.036	-1.183	-0.032	-1.056	
	조절변수	정치요인	정치이념	-0.036	-1.776*	-0.036	-1.756*
	상호 작용항	분배정책	교육정책 만족도			-0.021	-0.588
			과학기술정책 만족도			0.029	0.912
			문화관광정책 만족도			0.112	3.393**
			농수산정책 만족도			-0.008	-0.197
정보통신정책 만족도					-0.034	-1.014	
건설교통정책 만족도					-0.053	-1.776*	
자원·에너지정책 만족도					-0.007	-0.213	
중소벤처기업정책 만족도					-0.018	-0.494	
규제정책		환경정책 만족도			-0.046	-1.276	
		노동정책 만족도			0.101	2.869**	
		주택정책 만족도			0.005	0.133	

재분배 정책	치안정책 만족도			0.024	0.653
	재난·안전관리정책 만족도			-0.043	-1.232
	경제정책 만족도			0.000	0.010
	의료복지정책 만족도			-0.007	-0.199
	여성가족정책 만족도			-0.001	-0.048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도			-0.004	-0.111
	사회통합·갈등관리정책 만족도			-0.043	-1.451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도			0.083	2.302*
구성정책	통일정책 만족도			-0.039	-1.052
	외교통상정책 만족도			-0.048	-1.374
	국방정책 만족도			0.010	0.324
	국정관리정책 만족도			-0.001	-0.020
(상수)				14.575***	14.548***
R제곱				0.437	0.452
수정된 R제곱				0.427	0.433
F값 변화량				40.819***	1.727*

주: \*p<0.10, \*\*p<0.05, \*\*\*p<0.01

## 2. 분석적 함의

먼저 Lowi(1964, 1972)의 정책유형 분류에 따라 유형별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책만족도는 정책유형과 정책분야에 따라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첫째, 분배정책의 경우, 교육정책, 농수산정책, 자원·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책만족은 모두 대통령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분배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도가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특징을 지니며, 하위정부(sub-government) 중심의 협조적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정책만족을 유도하기 때문이다(Ripley & Franklin, 1980). 세부적으로 교육정책은 미래세대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고, 농수산정책은 생계 안정과 식량 안보 등 먹거리와 관련된 자원 공급을 도와주며, 자원·에너지정책은 냉난방 연료 공급, 에너지 안보 등 생활 필수자원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있어,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적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해당 정책들은 지방정부와의 협업으로 정책효과 체감도가 높아 정책만족이 대통령의 국정리더십과 대통령 신뢰로 귀속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Spitzer, 1983).

둘째, 재분배정책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정책 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재분배정책이 지닌 사회적 정당성, 공정성, 포용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정책평가가 달라지고, 이와 연계하여 대통령 신뢰의 형성도 달라지는 점을 보여준다(Schneider & Ingram, 1993; Rudolph, 2017). 예를 들어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융화시키려는 다문화정책의 경우,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화로 인해 국내 해외 인력의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즉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정당성이 커지면서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리더십과 사회적 수용

성에 대한 노력이 긍정적인 정책 방향성으로 인식되고 대통령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Flink et al., 2021). 반면,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증대, 지역격차 문제 해소 실패 등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여 정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대 불일치가 대통령 불신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구성정책에서는 통일정책 만족이 대통령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북 관계라는 특수한 안보·외교 환경 속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책성과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해당 정책의 평가를 정책수행 주체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Heckathorn & Maser, 1990). 일반적으로 구성정책은 시민의 체감성과 수혜성이 낮아 대통령 신뢰 전이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유형이지만(Spitzer, 1987), 예외적으로 통일정책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치적 상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상징정책(symbolic policy)으로서 대통령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규제정책은 전반적으로 대통령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정책이 수혜자와 피규제자 간 명확한 갈등 구도를 수반하고 정책만족에 대한 평가가 집단별로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 대통령 신뢰로 전이되는 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준다(Lowi, 1972; Tatalovich & Daynes, 1984). 즉 수혜자는 규제 강화로 혜택을 얻지만, 피규제자는 자유 제한, 비용부담 등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면서 반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이중구조는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로 일관되게 전이되지 못하는 양극화된 정치적 반응을 야기함을 알 수 있다(Schneider & Ingram, 1993)

다섯째, 조절변수가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부투명성과 삶의 만족은 대통령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정치이념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의 민주시민의식이 향상되고, 정책 결정과정과 행정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대통령 신뢰가 제고됨을 의미한다(Easton, 1965; Citrin & Stoker, 2018). 그리고 삶의 만족 역시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삶의 질과 관련되며, 높은 삶의 만족도는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발하여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반면, 정치이념은 대통령의 정당과 시민의 정치적 성향 간 이념적 일치 여부에 따라 대통령 신뢰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Bobbio, 1996; Norris, 1999). 특히 진보 성향 시민일수록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조사 시점의 정부 이념 성향과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간 불일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정책만족과 다양한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변수가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수용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부투명성과 정책만족의 상호작용항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농수산정책,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만족과 정부투명성의 상호작용항은 대통령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치안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과 정부투명성의 상호작용항은 대통령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민들의 식생활 및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 분야의 경우 생산, 유통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국민들의 정부 만족도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신뢰가 크게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의 경우 재분배정책으로서 공정성 인식이 중요한바 정부가 정책결정과정과 행정 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부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식시킨다면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향상됨을 나타낸다. 그리고 문화관광정책은 분배정책으로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제공하는데 해당 정책이 정보공개로 인해 정책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개인들의 수혜체감도가 높아진다면 대통령 신뢰도 증대됨을 보여준다. 반면, 치안정책의 경우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는 등 치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는 등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대통령 신뢰가 감소됨을 나타낸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생활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야로 관련 정책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현실적인 제약과 부작용을 인지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수락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삶의 만족과 정책만족의 상호작용항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정책, 통일정책,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만족과 삶의 만족의 상호작용항은 대통령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치안정책, 정보통신정책, 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만족과 삶의 만족의 상호작용항은 대통령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다음 세대의 미래와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 교육정책을 통해 향후 삶의 질과 경제적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커짐을 보여준다. 그리고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욕구가 커져 통일정책을 통해 남북 간 안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적절히 형성하는 경우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커짐을 보여준다.

또한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의 시행으로 개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정책 체감도가 향상된다면 이러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증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치안은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를 통제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활동으로 삶의 만족이 높은 사람일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더 강력한 치안정책을 기대하는 등 대통령의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욕구나 외국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므로 현실 정책의 제약과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표출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이념과 정책만족의 상호작용항이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정책,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노동정책에 대한 만족과 정치이념의 상호작용항은 대통령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건설교통정책에 대한 만족과 정치이념의 상호작용항은 대통령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통적으로 문화관광 분야가 부유한 계층의 향유물로 인식되었으나 문화관광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문화관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차별 해소와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주의일수록 대통령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의 경우 기존의 자원배분을 변경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존 사회체제를 변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의

이념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바 정치이념이 강해지면 정책만족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완화됨을 보여준다. 또한 취업 지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 차별을 지양하는 진보주의와 방향성을 같이 하면서 진보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정책만족이 대통령 신뢰를 증대시킴을 나타낸다. 반면, 건설교통정책은 정책 결정과정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회적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적 약자와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주의 이념과 다소 대치될 수 있는 바,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 건설교통정책 만족이 대통령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소가설	검증결과
(가설1) 정책만족은 대통령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배정책은 대통령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규제정책은 대통령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재분배정책은 대통령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구성정책은 대통령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인용
(가설2) 정부요인, 개인요인, 정치요인은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정부요인(정부투명성)은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일부 인용
	개인요인(삶의 만족)은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일부 인용
	정치요인(정치이념)은 정책만족과 대통령 신뢰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일부 인용

## V. 결론

본 연구는 정책유형별 만족도가 대통령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다양한 조절변수들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정책, 농수산 및 에너지정책,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통일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만족도와 일부 조절변수(정부투명성, 삶의 만족)가 대통령 신뢰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만족, 문화관광정책 만족, 농수산정책 만족 등은 일부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하여 대통령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 교육정책 만족은 대통령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장학금 확대,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교육 인프라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교육평등 모델과 독일의 듀얼시스템은 이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수산·에너지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식량·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 농어업 소득안정 지원, 친환경 농업 및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EU의 공동농업정책(CAP), 덴마크의 풍력에너지 전략은 의미있는 정책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형 정책 확대가 요구된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 확대, 다문화 이해교육,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며, 호주의 다문화 형평성 정책은 모범적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통일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인도적 지원 및 문화교류 확대,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적 연대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동서독 교류사례 및 개성공단 운영경험은 정책적 방향성 설정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균형 발전 및 안전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 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지방재정 지원 확대, 지역특화 산업 육성, 인프라 투자 균형 유지 등이 요구된다.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 EU의 지역균형정책은 벤치마킹 사례로 유효할 것이다. 아울러 치안정책의 인권친화성 및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 감시체계 강화, 스마트 치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영국의 독립경찰감시기구(IOPC) 및 싱가포르의 '세이프 시티 프로젝트'는 향후 실현가능한 선진 사례이다.

넷째, 디지털 신뢰 및 삶의 질 향상이다. 정보통신정책의 신뢰 확보를 위해 데이터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유럽연합과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는 관련 분야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참여형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국민참여 제도화, 반부패 시스템 강화, 공직 윤리제도 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신문고, 스웨덴의 투명예산제도는 참고할 수 있는 실천적 사례이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거 안정(공공임대주택), 복지 강화(기본소득, 의료보장), 일·가정 양립(근로시간 유연화, 육아휴직 보장)이 필요하며, 스웨덴의 보편복지 및 프랑스의 35시간제는 삶의 질 중심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치 기반 정치운영 전략이 요구된다.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대통령 신뢰가 낮아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념을 초월한 실용적 소통전략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 모델 설계가 필수적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핀란드의 수평적 협치모델은 포용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정책 설계의 대표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신뢰는 다양한 정책영역의 만족도를 통해 형성되며 이는 정부의 정당성과 효과성 확보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책영역별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포괄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민주적 거버넌스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연구범위의 한계이다. 대통령 신뢰는 정책만족 외에 정치적 사건, 사회경제적 조건, 언론 보도, 정당 일체감, 정치사회화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시기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단년도(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대통령 임기를 고려할 때, 대통령 신뢰에 대한 인식은 동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향후에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대통령 신뢰와 정책만족의 장기적 효과를 실증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성과와 정치적 신뢰 간 관계의 지속성, 누적 효과, 임기별 차이 등을 분석하여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보경. (2017). 「정치적 요인이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Lowi의 정책 유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병규·이근수. (2013). 대통령신뢰와 행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541-566.
- 김이수·최예나. (2019). 신정책유형 및 정책조합으로서 사회혁신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관협력 및 정부지원형 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23(1):135-160.
- 소순창·한형서. (2023).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3(3):101-136.
- 원성찬. (2024). 원자력규제기관활동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원자력규제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34(1):29-61.
- 윤수재·임다희. (2020). 국정과제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경제·복지분야 국정과제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2):1-28.
- 윤수재·황태연. (2022). 정책 만족도와 소통만족도 간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소통노력의 직·간접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3):83-114.
- 이근수. (2009).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의 영향요인 분석: 취임 1년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105-137.
- 이숙중·유희정. (201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2):53-82.
- 이지형·박형준. (2023). 정책유형별 정책대상집단 특성의 영향력 분석: 국회 정책세미나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7(4): 313-350.
- 이홍재. (2024).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영향요인: 보훈정책 인지, 이용, 정책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4(3):261-284.
- 조규철·지수호·한명성. (2023). 정책홍보는 어떻게 정부신뢰를 구축하는가: 정책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8(3):1-36.
- 최예나. (2024).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8(3):1-28.
- 최용선. (2013).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네트워크의 범위, 권력구조, 관계패턴, 안정성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재국·문국경·김재인·정건. (2025). 지방정부 역량이 도시재생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4(1):90-117.
- 한명철·민병익. (2023). 기초연금 정책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기초연금수혜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7(4):159-183.
- 황성수. (2024). 정부신뢰, 정치와 행정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정치, 행정, 경제, 사회자본, 인지구조특성의 영향요인 비교. 「한국행정학보」, 58(3):1-25.

- 황성욱·김태완·박혜빈. (2017). 국민 관점의 대통령 소통 평가 요인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PR학회」, 21(1):26-53.
- Almond, G. A., & Powell, G. B. (1978).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 Bianco, W. T. (1994). Trust: Representatives and Constituents. In John R. Hibbing & Elizabeth Theiss-Morse(eds.), *Congress as Public Enemy: Public Attitudes toward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317-33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bbio, N. (1996). *Left and Right: The Significance of a Political Distin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nley, V. A., Rudolph, T. J., & Rahn, W. M.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256.
- Citrin, J., & Stoker, L. (2018). Political Trust in a Cynical Ag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49-7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urtis, A. (2014). Cognitive Bias and Political Trust. *Political Psychology*, 35(6): 839-855.
- Dasgupta, P. (1988). Trust as a Commodity. In Diego Gambetta(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49-72. Oxford: Blackwell.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 Erikson, R. S., & Tedin, K. L. (2003). *American Public Opinion(6th ed.)*. New York: Longman.
- Fiorina, M. P., & Abrams, S. J. (2011). *Disconnect: The Breakdown of Representation in American Politic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Flink, C. M., Borry, E. L., & Stream, C. M. (2021). Equity in Public Administration: Normative Foundations and Empirical Front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31(3): 499-512.
- Freitag, M., & Ackermann, K. (2016). Whom to Trust? The Impact of Social Value Orientation, Institutional Trust, and Situational Factors on Cooperative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5(3): 485-503.
-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 Dorsey Press.
- Gay, C. (2002). Spirals of Trust? The Effect of Descriptive Repres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Their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17-732.
- Grimmelikhuisen, S. G., & Klijn, A. (2015). The Effects of Transparency on the Perceived Trustworthiness of a Government Organization: Evidence from an Online Experi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5(1): 137-157.

- Hakhverdian, A., & Mayne, Q. (2012). Institutional Trust, Education, and Corruption: A Micro-Macro Interactive Approach. *The Journal of Politics*, 74(3): 739-750.
- Heckathorn, D. D., & Maser, S. M. (1990). Explaining Changes in Policy Subsystems: Analysis of Coalition Stability and Policy Influ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4): 1197-1215.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therington, M. J., & Rudolph, T. J. (2008). *Why Washington Won't Work: Polarization, Political Trust, and the Governing Cri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therington, M. J., & Rudolph, T. J. (2015). *Why Washington Won't Work: Polarization, Political Trust, and the Governing Crisi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bbing, J. R., & Theiss-Morse, E. (1995). *Congress as Public Enemy: Public Attitudes toward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bbing, J. R., & Theiss-Morse, E. (2001). *Congress as Public Enemy: Public Attitudes toward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bbing, J. R., & Theiss-Morse, E. (2002). *Stealth Democracy: Americans' Beliefs about How Government Should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rschman, A.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umlin, S. (2007). Overloaded or Undermined? European Welfare States in the Face of Performance Dissatisfaction. In B. Rothstein & S. Holmberg(eds.), *What's Trust Got to Do with It?*, 52-75. Gothenburg: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 Lowi, T. J.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16(4): 677-715.
- Lowi, T.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298-310.
- Marsh, M., & Tilley, J. (2010). The Attribution of Credit and Blame to Governments and Its Impact on Vote Choi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115-134.
- Michell, R. E., & Michell, W. C. (1969). *The Limits of Voting: A Behavioral Analysis of Ballots and the Electorate*. Chicago: Rand McNally.
- Norris, P.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 (2011). *Democratic Deficit: Critical Citizens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 Ripley, R. B., & Franklin, G. A. (1980).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 Policy*. Homewood, IL: Dorsey Press.
- Ripley, R. B., & Franklin, G. A. (1986).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cy*. Homewood, IL: Dorsey Press.
- Rudolph, T. J. (2017).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1): 145-158.
- Rudolph, T. J., & Evans, J.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Schneider, A., & Ingram, H. (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34-347.
- Spitzer, R. J. (1983). Political Restraint in Regulatory Policy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1): 25-31.
- Spitzer, R. J. (1987). *Politics and Constitutionalism: The Louisiana Purchase and American Expansion, 1803-1898*.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Tatalovich, R., & Daynes, B. W. (1984). *Moral Controversies in American Politics: Cases in Social Regulatory Policy*. Armonk, NY: M.E. Sharpe.
-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Van De Walle, S., & Bouckaert, G. (2003). Public Service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The Problem of Caus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8-9): 891-913.
- Whiteley, P., Clarke, H. D., Sanders, D., & Stewart, M. C. (2016). *Brexit: Why Britain Voted to Leave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ller, J.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merli, S., & Hooghe, M. (Eds.). (2014). *Political Trust: Why Context Matters*. Colchester: ECPR Press.
- Zmerli, S., & Van Der Meer, T. W. G. (2017). *Handbook on Political Trust*.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최예나(崔睿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관리(민간위탁), 사회서비스정책, 복지정책, 지방행정 등이며, 연구로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주민과 선출직 기관들 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6)', '계약관료요인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2014)', '의료서비스분야의 편익적 선취(cream-skimming)에 관한 예비적 고찰(2012, 공저)' 등이 있다.(luckpink@naver.com).

## Abstract

### The Impact of Policy Satisfaction on Trust in the Presid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overnment Transparency, Life Satisfaction, and Political Ideology

Choi, Yen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satisfaction and trust in the president,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overnment transparency, life satisfaction, and political ideolog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Satisfaction with policies related to education, agriculture and fisheries, resources and energ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as found to increase trust in the president, whereas satisfaction with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decreased it. Furthermore, both government transparency and life satisfaction enhanced presidential trust, while political ideology had a negative effect on it. In addition,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satisfaction with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moderating variables generally increased trust in the president. And, satisfaction with cultural and tourism policies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trust in the president through its interaction with government transparency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First, policies in education, agriculture, fisheries, multiculturalism, and unification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Second, policies related to balanced development, public secur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hould be improved. Third, policy design should aim to enhanc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improve citizens' life satisfaction.

Key Words: presidential trust, policy satisfaction, policy types, government transparency, life satisfaction